

피해자들 벼랑끝에 몰렸는데... 與野, 주요 쟁점 합의할까

〈피해자 범위·보증금 반환 대책〉

전세사기특별법 심사

앞서 열린 세차례 소위 입장차 뚜렷
당정, 우선매수권·장기임대 등 제시
野, 합의 실패시 단독처리 가능성도



전세사기 강동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강동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전세 사기 피해자 범위, 보증금 반환 대책 등 쟁점을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는 16일 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관련 법률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네 번째 만남에서 여야는 그간 쟁점이었던 ▲전세 사기 피해자 범위 ▲보증금 반환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 뒤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그간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등을 각각 발의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들 법안에 대해 병합·심사한 뒤 단일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앞서 세 차례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16일 회의에서

쟁점을 다시 논의한 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지만, 입장차가 좁혀질지는 불투명하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식을 두고 여야 입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다른 사기 범죄와 형평성을 고려해 세금으로 보증금을 직접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에서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행사'로 보증금 지원을 요구하는 것과 입장이

좁혀질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제안한 '공공기관의 사기 피해자 전세 보증금 사후 정산' 방식도 여당에서 수용할지 불투명하다. 해당 방식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매·공매 등 절차에 따라 회수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이다.

정부·여당이 '세금으로 보증금 직접 지원 불가' 방침에 대해 유지하는 만큼,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 대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선회한 것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방식으로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여당은 이 같은 안에 대해 검토한 뒤 수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여당이 그동안 보증금 채권 매입안에 대해 반대해 온 만큼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여당은 ▲공공에서 주택 경·공매 대리 ▲피해자에 '우선 매수권' 부여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장 20년간 시세의 30~50% 수준에서 장기 임대 등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합의가 어려워지면,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합의를 위해) 가급적 노력하기로 했고 상임위 차원에서 여의치 않으면 원내지도부에서 나서서 합의하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 단독 처리도 시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에 더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 정부·여당이 다음 국토위 소위가 열리는 16일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최종 책임 지도부에 있어”... 이재명 ‘재신임론’ 부상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쇄신 의원총회

당 내 상황 엄중... 李대표 사퇴 거론도
“국민 눈높이에서 모든 상황 바라봐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쇄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5대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뒤숭숭한 당 내 분위기가 수습에 나섰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을 두고 일부 의원들의 성토가 나왔다는 후문이다.

이들의 주장은 당이 의원들로부터 불거진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및 자진 탈당 논란' 등으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최종적인 책임은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수도권 초선 의원은 1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신임을 묻자는 것은 다양한 의견 중 하나였다. 전반적으로 상황이 무거웠고 이 대표에게 재신임을 포함해서 심지어 사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대

체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모든 현안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시각이었다”면서도 “마지막 책임은 당 지도부와 당 대표에게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안이했다. 터진 문제들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과 정서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야말로 뼈를 깎는 쇄신이 있어야 한다. 가상자산 관련해서 국회의원 재산 등록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제도적으로 개선을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남국 의원과 관련한 부분은 개별 당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공식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의총에서 나온 이 대표 재신임론에 선을 그으며 반발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의총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신임론을 피운 의원들을 향해 “본색을 드러낸다.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오히려 본인이 당원들에게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재신임론을 두고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사이에선 여전히 지난해 전당대회 때부터 이어진 논쟁을 계속하는 모양새다. 직전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당원 다수의 지지를 받았으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후보라며 일각에 비판이 시달렸다.

친이재명계 의원실 보좌진은 이날 통화에서 “재신임론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현재 위기상황인 당의 근간을 더 흔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 대표 말고 다른 대안도 없는 상황이다. 역대 최고 지지율로 당선된 당 대표를 흔들지 말아야 하고 지금이야말로 대오단결의 시간이다. 그간 이 대표도 여러 당내부의 우려를 경청하고 인사 교체도 단행했다”고 했다.

반면, 비이재명계 의원실 보좌진은 “이 대표의 리더십 부재로 당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민생을 위한 입법과 정책 드라이브도 잘 먹이지 않고 있다”며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기 전까지만 일대오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난 지방선거 때 보여준 이 대표의 행보를 기점으로 그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 현장교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尹 대통령, 스승의날 간담회 “정부 교육정책, 다양성 초점”

교원 초청 오찬... “교권 바로 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우리 정부의 교육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조는 다양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교육현장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원 22명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특히, 윤 대통령의 초등학교 시절 은사인 이승우·손관식 선생님과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이었던 최윤복 선생님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기반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서 이제는 지식이 많은 소위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제는 바뀐 산업기반에 맞춰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자기 적성을 잘 발굴해 경쟁력 있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스승의 날을 맞아 열정과 헌신으로 교육현장을 지키는 선생님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으며 정부차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권을 탄탄하게 바로 세우는 일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국민의힘, 내달 9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온라인 방식... 가상자산 등 자격 강화

국민의힘이 내달 9일 온라인 방식으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태영호 의원이 선출직 최고위원에서 자진 사퇴한 데 따른 공석을 채우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15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한 뒤 첫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관위는 모두 7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국회 법제

사법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이 맡았다. 간사는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이며 위원으로 배현진 조직부총장, 홍석준·노용호 의원, 양홍규·함인경 변호사가 임명됐다. 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은 보궐선거 선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최고위 의결을 마친 뒤 같은 날 보궐선거 선관위 임명장까지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를 마친 뒤 첫 회의도 열렸다. 첫 회의에서는 최고

위원 보궐선거 방식, 후보 등록 공고일, 후보 등록 기간, 후보 자격 심사, 기탁금 등 주요 사항이 결정됐다.

먼저 최고위원 선출은 ARS와 결합한 온라인 방식으로 내달 9일 치른다. 이에 앞서 후보 등록 공고는 오는 26일 하기로 했다.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29~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자격 심사는 후보 등록을 마친 30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보궐선거 선관위원인 배현진 의원은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격 심사 기준과 관련해 “이전에 세운 선거 관련 부적격

자 심사 기준과 관련해서는 당내에 당규상 정해진 게 있고, 이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심사 대상에 넣는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특히 보궐선거 선관위는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례를 참고해 공직선거 자격 심사 자기검증 진술서에 코인 등 가상자산 보유 내용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도읍 위원장은 첫 회의 모두 발언에서 “공직선거 자격 심사에 있어 자기검증 진술서에 코인 등 가상자산 유무 관련 질의가 추가됐다”고 했다. /최영훈 기자